



밀양 송전탑과 전기 버튼

글 · 양홍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버튼 하나 누르면 바로 켜지는 조명과 편리하게 이용하는 가전제품. 하지만 우리가 쉽게 전기를 사용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전기생산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다. 70~80대 고령의 주민들이 한전과 시공사의 공사 강행에 맞서 온 몸으로 저항하다 실신해 쓰러지는 경남 밀양 76만5천볼트 송전탑 건설 현장이 바로 그것이다. 도시의 불을 밝히고 시민들의 편한 도시생활의 이면에는 발전소와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이 비극처럼 존재한다.

11월 30일~12월 1일 이틀간 진행된 밀양희망버스는 그 동안 에너지 혜택을 받기만 한 대도시 시민들의 참회와 차별받는 노동자들의 연대, 또 다른 밀양인 강원도 골프장 대책위와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함께 했다.

밀양역 앞에서 진행된 밀양송전탑 촛불문화제에서 만난 '밀양할매'는 연신 "고맙다"고 하셨다. 그 말은 내말인테 할매가 "고맙다"고 하신다. 그 동안 정부와 한전, 경찰에 당하신 서러움이 느껴졌다.

지금 우리 정치, 우리 행정에 없는 것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노력, 주민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과 태도다. 밀양 송전탑은 정부 정책과 행정의 현주소, 명분 없는 정책과 일방적인 행정을 다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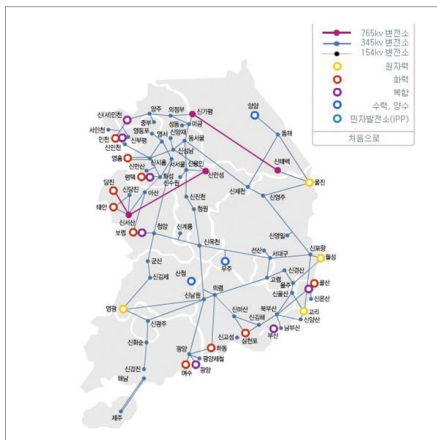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정부와 한전은 제대로 된 협의는 진행하지 않고 결국 10월부터 공사를 다시 강행하며 재개하며 주민들을 화유하고 협박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공사를 막으려는 주민들을 고소·고발로 위협하고 경찰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주민들을 통제하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의 공사 강행의 명분과 논리가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정부와 한전은 “내년 전력 수급을 위해 신고리 3,4호기를 가동해야 하고 이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신고리 3,4호기가 케이블 부품 문제로 언제 가동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수명 다 된 노후 원전을 폐기하면 밀양 송전탑이 필요 없다는 사실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기존의 송전선로를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한전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해 송전탑 신설만이 해결책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또한 5월 24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전이 기자간담회에서 “UAE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모델이 되었고, 동일모델인 신고리 3호기가 2015년까지 가동되지 않으면 지연된 기간만큼 매달 공사비의 0.25%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부담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고 밝혀 정부와 한전이 UAE 원전수출을 위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고압송전선로 신규 건설은 신고리 원전 4~6호기 신규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원전 증설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밀양송전탑 건설 강행 현장_대전충남녹색연합〉

우리 충남지역도 화력발전소 증설과 송전탑 건설문제로 갈등과 피해가 커지고 있다. 보령화력 주변 주민들은 날리는 석탄재와 석탄가루 때문에 밖에 빨래도 널지 못한다. 발전 온배수¹⁾로 인한 해양생태계 교란도 심각해 어획량이 줄면서 어업인구도 줄고 있으며 회처리장(발전하며 태우고 남은 석탄재를 처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의 갯벌도 계속 매립되어 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 건강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발전소 주변 5km 이내 은포, 고정리 등 10개 마을 주민

1) 취수한 해수를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한 후 고온 상태로 배출되는 방류수, 자연해수보다 연 평균 약 7도 정도 높다

들은 1990년 이후 암 발생환자가 70여 명에 이르고 기형아도 출산 되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과 보령시의 건강피해 조사 및 대책 마련 요구도 발전소 측의 목사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올 해 대전충남녹색연합과 김제남 국회의원 오마이뉴스 공동 기획으로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피해와 문제를 집중 조명하면서 충남도가 내년에 관련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하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충남지역 송전탑은 전국 4만 1,545개 중 4,142개가 설치되어 있다.

초고압 765kV 당진화력~신서산~신안성 구간과 345kV 청양~보령화력 구간은 민원이 끊이지 않는 구간이다. 소음과 전자파로 주민 건강 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농축산업 피해, 지가 하락 등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6차 <장기 송·배전설비계획>에서도 추가 초고압 송전선 건설계획이 있어 현재 총연장 3만1,600km인 송전선은 2027년에 3만8,600km로 7,000km가 더 늘어날 예정이다. 충남지역 또한 북당진-신탄정간 34km 345kV 송전선과 당진화력과 북당진 변전소간 35.2km의 345kV 송전선, 북당진-서안성간 50km의 HVDC(초고압직류송전)건설이 계획도되어 있다.

현재 충남에는 당진화력(한국동서발전), 태안화력(한국서부발전), 보령화력(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한국중부발전), 동부그린당진발전소, 부곡복합화력 등이 있고 우리나라 전체 화력발전 설비(2,937만kW)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올 2월, '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화력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량을 1,580만kW로 상향했다. 또 태안화력9·10호기(200만kW)가 증설 중이고 보령화력에서는 신보령 1·2호기(200만kW)가 증설 공사 중에 있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충남에선 당진복합화력 5호기(95만kW급)와 신서천화력 1·2호기(100만kW) 건설 사업이 또 시작된다.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문제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대전 중촌동 짜장어린이마을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기, 주민설명회 _ 대전충남녹색연합〉

우리가 쉽게 쓰는 전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환경문제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이제 바로 보아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던 문제의 전력산업과 비효율적인 에너지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일방적인 송전선로 건설 방식을 개선하고 민주적 절차를 보완하는 문제는 <전원개발촉진법> 폐지 또는 전면개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 관련 법과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발전세의 개편과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같은 제도 보완을 통해 발전소와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과 1.1% 정도 되는 충남지역 송전선로 지중화율도 높여서 민원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 충남도는 내년 화력발전소 관련 테스크포스팀을 만들면 제일 먼저 충남지역 화력발전과 송전설비에 대한 현황과 문제를 조사하는 연구 사업부터 해야 한다. 주민들이 한전과 개별적으로 싸우도록 방지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을 통해 정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여러 나라에서 원전 증설을 포기하고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화력발전도 비용의 상승, 환경문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미래 탄소 가격의 상승 등을 이유로 신설을 포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원전과 화력발전을 증설하는 후진적인 에너지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지만 최근 자치단체들의 변화와 시도는 의미가 작지 않다. 2012년 3월 45개 자치단체장들의 ‘탈핵 및 에너지정책 전환 선언’과 서울시의 ‘원전1기 줄이기 정책’은 최근 한국 사회의 에너지 담론과 정책을 이끌고 있다. 서울시 등 자치단체의 에너지행정과 정책의 핵심은 주민참여와 소통이다. 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주민참여형, 거버넌스형 에너지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

대전지역도 대전충남녹색연합과 한국가스공사 충청지역본부, 유성구청, 모통이마을어린이도서관이 ‘유성에너지동립만세’라는 마을에너지자립운동을 시작했다. 마을에너지자립은 태양광발전기 설치와 주민절전소를 통한 에너지 절감으로 에너지 생산은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낮추는 것이다. 주민절전소는 해마다 어린이도서관 등 현재 5호까지 설치되어 100가구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데 내가 절약한 전력이 남이 쓸 수 있는 생산 전력이라는 개념으로 전력을 모으고 있다.

에너지정책도 분산과 분권이 필요하다. 화력과 원자력 등 대규모 발전과 공급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과 정책은 이제 작별을 고해야 한다. 지역형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요관리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수요관리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과 정책은 자치단체가 앞장서고 주민들의 참여로 채워야 한다. 풀뿌리 에너지자치가 희망이다.